

## 국가온실가스 감축안 발표와 충청남도 현안

이상신 / 표정기
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, sinslee@cni.re.kr

- ◇ 6월 30일 정부는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대비 37%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
- ◇ 향후 조치로 에너지 新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 등 정부정책 기조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경제 피해최소화와 기회창출 계기마련 필요

### □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내용

-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 37% 감축목표 확정 · 당사국총회 제출(6/30)
  - 기존 정부 제3안(25.7%) + 국제시장(배출권 구매, 상쇄 등) 활용 감축(11.3%)



[그림]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그림(환경부 보도자료, 2015.06.3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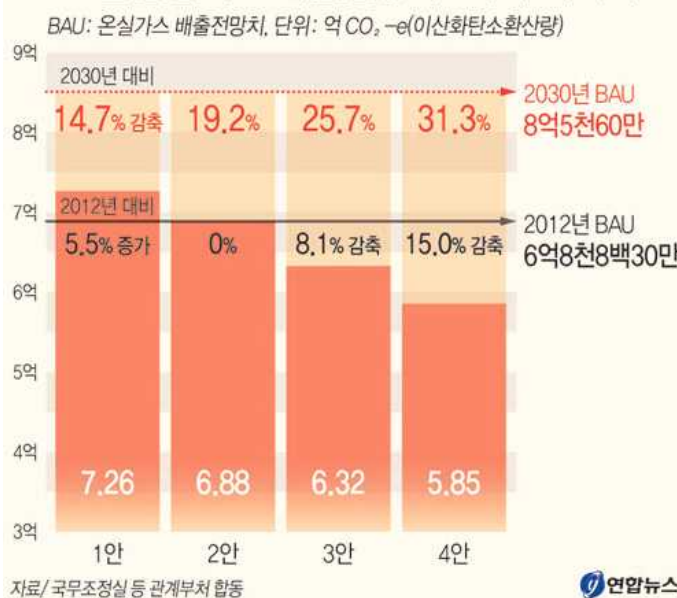
- ▶ '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(개도국 감축의무 제외)의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감축의무에 참여하는 **신기후체제(Post-2020)** 출범을 결정
- ▶ '15년 12월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Post-2020의 구체적 협상문안이 확정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공약(INDC :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을 9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
- ▶ 국가별 INDC 작성·제출에 대한 합의는 '14년 리마총회에서 결정됨

## ○ 온실가스 감축목표 37%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

- 2030년 BAU 8억5,00만톤의 37%인 3억1,473만톤 줄여, 5억3,587만톤 배출
-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중 3안(25.7%) +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(11.3%)
- 전체 감축량의 1/3 정도를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새 감축수단으로 활용
- 산업부문 감축률은 2030년 산업부문 BAU대비 최대 12%까지만 감축
- 에너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매년 4%대 성장으로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점 :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, (가칭)에너지신산업 육성특별법 제정 등 추진
- 발전(원전추가 고려), 수송, 건물 등 추가 감축여력 확보와 감축 기술개발 집중

### ▶ 이에 앞서 6월 11일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(4가지 안)

####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4가지 시나리오



- 모든 안이 기존 2020년 배출량 목표치 5억4,300만톤 보다 높음  
→ 기존공약 후퇴방지 원칙위배 문제 발생

※ 5억 4,300만톤(이명박 정부가 '09년 발표한 배출량목표) - 2020년 BAU 7억7,610만톤 대비 30%(2억3,310만톤) 감축

## □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안 쟁점

- 2009년 발표대비 목표 배출량이 713만톤 감소했으나 목표기간 고려시 실질적 후퇴 ➡ 세계 첫 후퇴 국가 논란('05년 기준, 5년당 감축량 210만톤 감소)

구분	목표년	BAU대비 감축목표	목표배출량 (만톤)	감축목표량 ('05년 기준)	5년당 감축량(5년)
'09년 목표	2020년	30%	54,300	2,650만톤	883만톤
'15년 목표	2030년	37%	53,587	3,363만톤	673만톤
내부감축		25.7%	('05년 배출량 56,950만톤)	'09년 대비 '15년 증감량	
상쇄구입		11.3%		+713만톤	-210만톤

- INDC '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금지(NO Backsliding)' 원칙 위반
- UNFCCC 주요원칙인 '공통의 차별화된 책임' 벗어남
- 배출권구매로 OECD 회원국 권고사항인 '원인자 부담원칙' 미준수 논란
- ※ 국제탄소크레딧 활용 사례 : 스위스(부분적 활용), 캐나다(강건한(robust) 시스템 구축 조건 활용), 멕시코(신뢰 높은 시장 메커니즘 활용 필요) 등

- 감축목표 후퇴국 낙인에 따른 국제적 압력 직면 가능
-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의 기업 부담 작용 vs. 기업 체질개선 계기

## □ 향후일정 및 국가별 INDC 제출현황



○ 6월 30일 현재 미국·EU 등 총 39개국 INDC 제출

○ 선진국은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방식, 일부 개도국은 BAU 대비 방식 목표설정

국가	목표연도	기준연도	감축률	국가	목표연도	기준연도	감축률
미국	2025년	2005년	25~28%	러시아	2030년	1990년	25~30%
EU	2030년	1990년	최소 40%	캐나다	2030년	BAU대비	25~40%
스위스	2030년	1990년	50%	모로코	2030년	BAU대비	13~32%
캐나다	2030년	2005년	30%	안도라	2030년	BAU대비	37%
노르웨이	2030년	1990년	40%	가봉	2025년	BAU대비	50%

## □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제언

○ 저탄소사회를 위한 충청남도의 기회

- 국내외 환경산업의 급성장, 국제사회의 녹색통상 증가로 녹색사업 판로개척 유리, 타 분야보다 높은 녹색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, 정부 주력사업인 창조경제관련 사업내 녹색기술 비중(약 70%) 등

○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고려되어야할 현안들

- 배출권거래제도 대응을 위한 ‘배출권 실무협의체 운영’
-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‘충남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’
- 감축목표 달성의 첫걸음인 ‘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관리 철저’
- 국가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‘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정·검토’
- 관련분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‘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’ 완화정책 개발

○ 저탄소사회와 고탄소사회를 위한 투자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며, CO<sub>2</sub> 증가가 도시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, 도시의 형태, 인프라, 경영방식 등의 차이가 성장을 좌우함(인용: NCE2015, the New Climate Economy)

- 경제투자가 저탄소사회를 완성해 주지 않음으로,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술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연구아이디어 개발 필요